

KCCI ESG NEWSLETTER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 전문가 기고
각자의 ESG를 넘어, 공공에서 중소기업으로
- ESG 주요 현안
국가가 ESG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왜 그 파도가 중소기업에 먼저 닿는가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되지 않는다
공급망 실사 대응, 비용에서 성과로
요구하는 공공에서 함께 만드는 공공으로

- 국내외 주요 ESG 뉴스
- ESG 통계 지표
ESG 금융
ESG 평가
기타 통계

2026

각자의 ESG를 넘어, 공공에서 중소기업으로

지자체·지역공기업·
공공기관·민간기업이
하나의 방향으로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2026 대한민국 ESG 엑스포
추진위원장



“모두가 잘 사는 세상, ESG로 설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자체와 지역공기업,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각자의 ESG를 각자의 속도로 해 온 시간이 있었다. 이제 과제는 각자의 ESG를 넘어 하나의 방향으로 모으는 일이다. 대한민국 ESG 대전환이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공공기관 ESG 경영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37개 핵심지표와 80개 세부지표로 공공기관의 ESG를 처음으로 표준화한 문서다. 지표가 만들어지고 경영평가와 연결되는 순간, ESG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예산 부처에서 오래 일하며 배운 원칙은 단순하다.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목표는 관리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는 목표는 예산을 받지 못한다. 국가재정과 정책금융, 공공조달, 자본시장이 처음으로 같은 기준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 지금 국면의 본질이다.

그런데 이 변화의 청구서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에만 오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의 사회(S) 영역 14개 지표에는 안전과 인권, 상생협력이 들어 있다. 공공기관이 협력업체와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인권을 자기 성과로 공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질문은 협력 중소기업에게 간다. 공공기관의 ESG 전환은 그 기관 안에서 끝나지 않고, 조달과 계약을 따라 공급망 끝의 중소기업까지 이어진다.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 시행이 2029년으로 미뤄졌다는 소식에 안도한 기업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거래를 결정하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원청의 조달기준이다. 달라진 것은 시점이 아니라 이유다. ESG는 이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거래를 유지하기 위한 성과다.

요구는 이미 확정됐고 대응은 비어 있다.

지금 이 체계를 짜게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다.

우리 공사는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ESG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해 공개해 왔다. 완벽한 방법론은 없었다. 그러나 측정을 시작한 순간 대화가 달라졌다. 비용을 얼마 썼느냐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만들었느냐를 묻게 되었고, 그 질문은 예산 배분을 바꿨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권하고 싶은 것은 보고서가 아니라 데이터다. 원청의 평가표와 실사 질문지에 답하기 위해 모으는 그 데이터가 그대로 성과를 증명하는 원재료다. 전력요금 고지서와 폐기물 인계서, 산재 기록은 이미 회사 안에 있다. 반복되는 항목 열다섯 개만 골라 엑셀 한 장으로 관리하면 된다. 한 번 만들어 두 번 쓰는 일이다.

각자의 ESG를 넘어, 공공에서 중소기업으로

지자체·지역공기업·
공공기관·민간기업이
하나의 방향으로

동시에 공공이 할 일이 남아 있다. 우리는 협력업체의 인권 위험을 점검하는 요구자이면서, 상생펀드와 공공구매상담회를 운영하는 지원자다. 문제는 그 두 제도가 서로를 모른다는 점이다. 실사에 성실히 대응한 기업이 금리나 조달 심사에서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ESG는 계속 서류로 남는다. 증명한 성과가 금리와 수주로 돌아오는 경로를 공공이 먼저 만들어야 한다.

오는 12월 킨텍스에서 제1회 대한민국 ESG 엑스포가 열린다. 「모두가 잘 사는 세상, ESG로 설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가 이 행사에 붙인 이름이다. 그 말에는 대기업과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공급망 끝의 중소기업까지 포함된다. 공공기관의 ESG 전환이 중소기업의 기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문장은 절반만 참이다. 중소기업에 ESG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각자의 ESG를 넘어, 공공에서 중소기업으로

전문가 기고에서 제시한 다섯 갈래의 논지를 제도·수치·실무 절차 단위로 상세히 풀어 정리했다. 각 장은 도식과 표로 요약해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장	주제	핵심 질문
1	국가가 ESG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엇이 제도로 확정되었는가
2	왜 그 파도가 중소기업에 먼저 닿는가	요구는 어떤 경로로 내려오는가
3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되지 않는다	성과는 어떻게 증명되는가
4	공급망 실사 대응, 비용에서 성과로	중소기업은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5	요구하는 공공에서 함께 만드는 공공으로	누가 그 성과를 인정하는가

1. 국가가 ESG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2025년 12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여덟 달 동안, 국내 ESG 제도는 권고의 단계를 벗어나 계량화된 관리체계로 재편되었다. 공공기관에는 표준지표가 부여되고, 민간에는 공시기준이 확정되고, 탄소에는 가격이 붙었다. 세 흐름이 동시에 진행된 것이 이 국면의 특징이다.

공공부문 37개 핵심지표로 표준화된 ESG

기획재정부는 2025년 12월 10일 「공공기관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37개 핵심지표와 80개 세부지표로 구성되며, 필수지표와 자율지표를 구분하고 목표 달성도·노력·성과·향후 계획 등 정성적 서술을 함께 요구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ESG 공시 내실화와 경영평가 연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지표 구성 - 사회(S)에 무게가 실려 있다 >

환경 (E)	→	사회 (S)	→	지배구조 (G)
13개 지표 / 16개 세부 온실가스·에너지·폐기물		14개 지표 / 38개 세부 안전·인권·상생협력		10개 지표 / 26개 세부 투명성·윤리경영

세부지표 80개 가운데 38개, 약 절반이 사회(S) 영역에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그 사회 영역의 핵심 축이 안전·인권·상생협력이다. 이 배분이 2장에서 설명할 공급망 전이의 출발점이 된다.

민간부문 공시기준 확정과 의무화 시간표

2026년 7월 7일 KSSB(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ISSB 기준을 기반으로 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확정·발표했다. 이어 7월 8일에는 ESG 공시 의무화 최종 로드맵이 확정되어 2028년 자산 10조 원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하는 일정이 제시되었다. 금융위원회는 기후변화가 매출에 미칠 영향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방침도 검토 중이다.

각자의 ESG를 넘어, 공공에서 중소기업으로

탄소부문 비용으로 확정된 배출량

K-ETS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이 시작되며 배출허용총량은 16.8% 축소되고 유상할당은 발전부문 15%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향후 5년간 기업이 추가로 부담할 배출권 구매비용은 약 26조 9,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국경 조정 비용도 현실화되었다 - 현대차·기아의 유럽공장 CBAM 비용은 최대 1,44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자본부문 사라지지 않은 질문

2026년 6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은 기관투자자가 기업에 관여할 때 ESG 요소를 고려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글로벌 ESG 백래시 국면에도 자본의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고, 관여의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다.

< 2025~2029 ESG 제도 시간표 >

시점	제도	기업에 미치는 영향
2025.12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확정	37개 지표·경영평가 연계 추진
2026.01	K-ETS 4차 계획기간 개시	배출허용총량 16.8% 축소, 유상할당 확대
2026.06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기관투자자 관여 시 ESG 고려 명문화
2026.07	KSSB 공시기준 확정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언어의 통일
2026.12	제1회 대한민국 ESG 엑스포	공공·민간·지자체 성과 인정 플랫폼 출범
2028	ESG 공시 의무화 1단계	자산 10조 원 이상 기업 우선 적용
2028.07	EU CSDDD 국내법 전환 기한	EU 회원국 입법 완료
2029.07	EU CSDDD 기업 준수 개시	직원 5,000명·매출 15억 유로 이상 대상

출처: 각 항목 출처는 본문 및 문서 말미 참고자료 참조

재정·자본·조달이 같은 기준으로 정렬되기 시작한 것이 지금 국면의 본질이다.

2. 왜 그 파도가 중소기업에 먼저 닿는가

제도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부담은 협력 중소기업에 먼저 도착한다. 공시 주체가 자기 성과를 증명하려면 공급망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는 협력사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각자의 ESG를 넘어, 공공에서 중소기업으로

전이 메커니즘 제도가 요구를 만든다

< ESG 요구의 전이 경로 >

제도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S영역에 안전·인권·상생협력 배치 / KSSB 공시기준 확정 / 2028년 공시 의무화
공시 주체	공공기관·대기업이 협력사와 현장 근로자의 안전·인권을 자기 지표로 관리·공시해야 하는 의무 발생
전달 수단	원청 협력사 평가표·EcoVadis 등 외부 평가·공공조달 ESG 가점·금융기관 여신 심사
최종 부담	협력 중소기업이 데이터 제출·증빙·개선 이행의 실무를 수행 - 규제 대상이 아니어도 실질 의무 발생

중요한 점은 이 경로가 법적 강제가 아니라 계약과 심사를 통해 작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 일정과 무관하게 이미 가동 중이다.

규제 지연은 유예가 아니다 EU 옴니버스 I의 함의

2026년 확정된 EU 옴니버스 I 지침으로 CSDDD의 좌표가 크게 바뀌었다. 직접 적용 대상은 대폭 축소되고 시행 시점은 단일화되었으며, 공급망 정보요구에도 비례성 원칙이 명문화되었다.

구분	원안	옴니버스 I 최종
적용 대상	직원 1,000명 이상 매출 4.5억 유로 이상	직원 5,000명 이상·매출 15억 유로 이상 (비EU 기업은 EU 내 매출 15억 유로 이상)
시행 방식	규모별 단계적 적용	단일 시점 - 국내법 전환 2028.7.26 / 기업 준수 2029.7.26
공급망 정보요구	포괄적 요구 가능	"필요한 정보만, 대상 지정적으로, 비례적으로" 중소기업 연쇄 부담 제한 명문화
모니터링	일괄 점검	비례적·위험 기반(risk-based) 평가로 재구성

그러나 실제 거래를 결정하는 힘은 규제가 아니다. 원청의 조달기준, 외부 평가 등급, 공공조달 가점, 여신 심사는 EU 일정과 무관하게 작동한다. 국내에서도 EU 공급망 실사 지침에 대한 국내 기업 미준비 실태가 지적되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의견을 모아 EU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즉 요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요구의 근거가 규제에서 거래 조건으로 옮겨간 것이다.

각자의 ESG를 넘어, 공공에서 중소기업으로

요구는 확정, 대응은 공백

문제는 준비 수준이다. 국내에서 협력사에 대해 실제로 ESG 평가실사를 수행하는 비율은 10%를 넘지 못한다는 조사가 있다. 요구 체계는 제도로 확정되었는데 대응 체계는 아직 만들 어지지 않은 상태다. 역설적으로 이것이 기회다. 규제 시점이 2028~2029년으로 정리된 지 금이 비용을 낮게 들여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구간이다.

◆ 지금 시작하면

이미 보유한 문서를 정리하는 수준의 비용, 단계적 개선, 지원사업 활용 가능

◆ 요구를 받고 시작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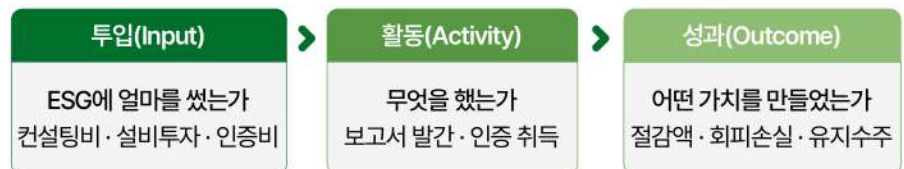
마감에 맞춘 외부 용역, 인증 취득 비용, 개선 이행 압박이 동시에 발생

3.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되지 않는다

공시와 성과는 다른 문제다. 공시는 무엇을 했는지 알리는 일이고, 성과 측정은 그것이 어떤 가치를 만들었는지 증명하는 일이다. 국내 ESG 논의는 오랫동안 앞의 절반에 머물러 있었다.

성과주의 예산의 원리를 ESG에 대입하면

< 투입 관리에서 성과 관리로 >



예산 편성의 원칙은 단순하다.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목표는 관리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는 목표는 자원을 배분받지 못한다. ESG도 같다. 투입과 활동만 보고하는 조직에서 ESG는 영구적인 비용 항목으로 남지만, 성과를 계량하는 조직에서는 투자 항목으로 옮겨간다.

공공기관의 실험 ESG 성과를 화폐가치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국내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ESG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해 측정·공개했다. 2023년 ESG 성과가치는 1조 4,623억 원으로 산출되었고, 이 성과로 2025년 국가공현대상 ESG경영부문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환경 영역에서는 모듈러 주택 건립을 통한 탄소배출 35% 감축과 2050년 재생에너지 100% 전환 계획, 사회 영역에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배구조 영역에서는 건설원가 정보 공개와 도민주주단 운영이 측정 대상에 포함되었다.

각자의 ESG를 넘어, 공공에서 중소기업으로

측정의 한계도 함께 읽어야 한다

- ◆ 화폐 환산은 정밀한 회계가 아니다. 환산 계수와 가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절대금액의 크기보다 연도 간 추세와 항목 간 비중이 의미를 갖는다.
- ◆ 따라서 외부 홍보용 수치로 쓰기보다 내부 의사결정용 근사치로 쓰는 것이 안전하다.
- ◆ 가장 나쁜 선택은 완벽한 방법론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측정하지 않는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반복 측정하는 일관성이 정밀도보다 중요하다.의 크기보다 연도 간 추세와 항목 간 비중이 의미를 갖는다.

4. 공급망 실사 대응, 비용에서 성과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실사 대응은 100% 비용으로 인식된다. 인증비, 컨설팅비, 설비투자, 담당자 인건비가 모두 지출로 잡히고 돌아오는 것은 서류뿐이라는 감각이다. 그러나 실사 대응으로 모으는 데이터와 성과를 증명하는 데이터는 같은 것이다.

왼쪽 열은 부담이고 오른쪽 열은 성과다.
둘은 다른 일이 아니라 같은 데이터의 두 얼굴이다

< 실사 요구를 경영 성과로 환산하는 매핑 >

실사평가 요구 항목	중소기업이 모으는 데이터	성과(금액)로 환산되는 값
온실가스·에너지	전력·연료 사용량, Scope 1·2 배출량	에너지비 절감액, 향후 탄소비용 회피액
산업안전·보건	재해율, 위험성평가 이력, 아차사고 기록	산재보험료 절감, 작업중단 손실 회피액
인권·노동	근로시간, 외국인 근로자 관리, 고충처리	이직률 감소에 따른 채용·재교육 비용 절감
폐기물·자원순환	폐기물 발생량, 재활용률, 인계서	처리비 절감, 재생원료 조달·판매 이익
윤리·준법	행동규범, 제보채널 운영, 교육 이력	거래 중단·계약 해지 리스크 회피액
하위 공급망 관리	2차 협력사 현황 및 평가 이력	원청 평가등급 유지 → 수주 물량·단가 방어

각자의 ESG를 넘어, 공공에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실행 3단계

엑셀 한 장에서 시작한다

< 데이터 체계 구축 로드맵 >

1단계 모으기 (1~2개월)

원청 평가표·외부 평가 질문지에서 반복되는 항목만 추려 10~15개 지표 관리대장(엑셀 1장)을 만든다. 전력요금 고지서, 폐기물 인계서, 산재 기록, 근로시간 대장처럼 이미 회사에 있는 문서가 출발점이다. 새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다.



2단계 잇기 (3~6개월)

같은 데이터를 세 곳에 재사용한다. ① 원청·평가기관 제출 ② 내부 개선과제 도출 ③ 금융·지원사업 신청. 담당자 1명 지정, 월 1회 갱신을 규칙으로 고정한다. 갱신 주기를 지키는 것이 지표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 중요하다.



3단계 환산하기 (6개월 이후)

핵심 3개만 금액으로 계산한다. 에너지 절감액, 산재 회피액, 수주 유지금액. 정밀함보다 매년 같은 방식으로 반복 계산하는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 숫자가 경영진 설득과 금융·조달 심사의 언어가 된다.

업종별 우선 착수 지표

업종	가장 먼저 요구받는 항목	먼저 정리할 문서
제조 (금속·화학)	온실가스·에너지, 화학물질 관리, 산업안전	전력·가스 고지서, MSDS, 위험성평가서
건설·자재	현장 안전, 하도급 인권, 폐기물	안전관리계획, 근로계약·근로시간, 폐기물 인계서
전기·전자 부품	Scope 1·2·3, 분쟁광물, 강제노동	에너지 사용량, 원자재 원산지, 근로자 채용 경로
식품·유통	위생·품질, 협력사 관리, 포장 폐기물	품질 인증, 협력사 명부, 포장재 사용량
IT·서비스	정보보호, 인권·노동, 윤리	ISMS 등 인증, 근로시간, 행동규범·교육 이력

각자의 ESG를 넘어, 공공에서 중소기업으로

활용 가능한 외부 지원

- ◆ 수출 중소기업 ESG 공급망 컨설팅 지원사업 -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K-ESG)가 운영하는 2026년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 컨설팅을 지원한다.
- ◆ 지자체 중소기업 ESG 지원사업 - 서울시 중소기업 ESG 지원사업 등 지역 단위 프로그램. 진단·컨설팅·교육이 패키지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 ◆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 에너지효율 개선 설비 투자 시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수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인증 취득이 목적이 되는 순간 비용만 남는다.

실사 대응의 산출물은 인증서가 아니라 관리되는 데이터다.

5. 요구하는 공공에서 함께 만드는 공공으로

공공기관은 공급망 ESG의 요구자이면서 동시에 지원자다. 협력업체의 인권 위험을 점검하는 주체이자, 자금과 판로를 지원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 두 역할이 서로를 모른다는 점이다.

사례 GH의 상생지원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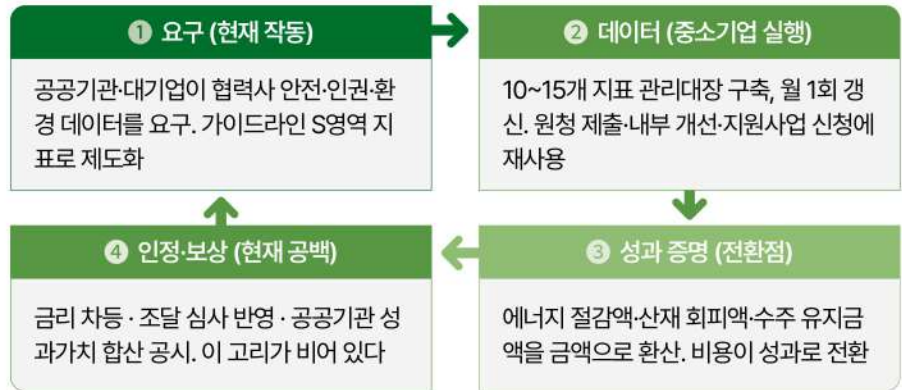
제도	중소기업이 모으는 데이터	의미
GH 상생펀드	2026년 3월 조성 300억 원. 공사가 금융기관에 예약하고 발생 이자로 금리를 감면 - 연 3.05%p 인하, 기업당 최대 10억 원(최대 한도 이용 시 연 약 3,050만 원 절감). 약 5개월 만에 전액 소진, 37개사 이용	공공이 중소기업 금융비용을 실제로 낮춘 검증된 수단. 현재 ESG 성과와는 무연동
공공구매상담회	2026년 94개사 신청·63개사 선정, 공사 14개 발주서와 200여 회 1:1 매칭. 참여 규모 2024년 41개사 → 2025년 53개사 → 2026년 63개사	조달을 통한 판로 지원. 선정 기준에 실사 대응 실적을 반영할 여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전국 공공기관 중 2년 연속 1위 - 2024년 94.7%, 2025년 94.8%	공공조달이 중소기업 매출에 갖는 실제 무게
인권경영체계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7년 연속 유지(2020년 첫 인증). 협력업체와 건설현장 근로자 등 공급망 전반의 인권 위험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사업 절차에 반영	공공기관이 이미 공급망 인권실사를 수행하는 요구자임을 보여주는 사례
GH 베이스캠프	판교 입주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2026년 5개사 선발, 국내 교육 후 해외 스타트업 행사 참가 지원	지원의 형태가 자금·판로·역량으로 다양화될 수 있음
ESG 성과 측정	공공기관 최초 ESG 성과 화폐가치 측정. 2023년 1조 4,623억 원	요구와 지원을 잇는 공통 언어(측정)를 이미 보유

각자의 ESG를 넘어, 공공에서 중소기업으로

끊어진 고리 요구와 지원이 서로를 모른다

상생펀드의 금리 감면은 ESG 성과와 무관하게 결정되고, 공공구매상담회는 인증 보유 여부로 선정한다. 반대로 공사는 협력업체의 인권 위험을 점검하지만, 잘 관리한 기업에 돌려줄 보상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실사에 성실히 대응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같은 조건으로 자금을 쓰고 같은 기준으로 조달 심사를 받는다면, ESG는 계속 서류로 남는다.

< ESG 성과 연동형 상생지원 - 끊어진 고리를 잇는 순환 구조 >



제언 세 개의 연결 장치

영역	연결 방법	기대 효과
금융	상생펀드 금리 감면 폭을 ESG 데이터 관리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ESG 성과가 금융비용으로 즉시 환산 - 중소기업 경영진 설득 논리 확보
조달	공공구매상담회 선정 및 계약 심사에 실사 대응 실적 반영	판로가 인센티브로 작동. 원청 평가 대응이 공공조달 대응과 통합
인정	협력사 ESG 성과를 공공기관 성과가치에 합산해 공시	가이드라인 S영역 상생협력 지표와 직결 - 공공기관에 지원 동기 부여

중소기업에 ESG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증명한 성과가 금리와 수주로 돌아오는 경로를 공공이 먼저 만들어야 한다.

2026 대한민국 ESG 엑스포 성과를 인정하는 판

제1회 대한민국 ESG 엑스포가 2026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모두가 잘 사는 세상, ESG로 설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민간기업·공공기관·지자체가 각자의 ESG를 넘어 하나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자리를 지향한다. 행사가 내세운 세 가지 차별점 중 하나가 ESG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기회이며, 전시관은 ESG 전략·거버넌스, 공급망·상생·도시재생, 기후·환경 실행, ESG 비즈니스·투자 연계, 지자체·공공기관 ESG 혁신의 5개 존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공급망·상생 전시존은 본 기고가 지정한 요구와 지원의 연결을 실제로 시연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E

환경

기후 변화 대응

녹색금융

친환경 기술 혁신

‘선형 감축경로’ 택한 탄소중립법, 매년 일정 비율로 온실가스 감축

경향신문 | 2026-08-26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62119005/>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계약시장 제도’로 전면 개편...“발전단가 낮춘다”

머니투데이 | 2026-08-20 | <https://www.mt.co.kr/economy/2026/08/20/2026082019152290049>

3만원도 뚫렸다...1년 만에 3.5배 뚫 배출권, 예비분 기준 마련은 지연

파이낸셜뉴스 | 2027-08-27 | <https://www.fnnews.com/news/202608251509013759>

‘안보전원’ 남겨라...2040년 탈석탄 목표 흔드는 ‘화력발전소 옆 데이터센터’

경향신문 | 2026-08-24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42059005/>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대체투자까지 ‘책임투자’ 근거 마련

이데일리 | 2026-08-20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5608806645549288>

122년 기상 관측사 뚫었다...양산 42.5도 ‘초유의 폭염’(상보)

아시아경제 | 2026-08-02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80213533076651>

S

사회

산업 안전

노동권

동반 성장

소비자 보호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관 모집 안내

한국장애인개발원 소식 | 2026-08-20 | <https://esg.korcham.net/NEWSEVENT/?idx=173252479&bmode=view>

자발적 이직 청년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연내 입법

경향신문 | 2026-08-04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041736001>

프로야구도 멈췄는데 폭염현장은...“사고시 중대재해법 적용”[노동TALK]

이데일리 | 2026-08-08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43686645545352&mediaCodeNo=257>

메가프로젝트 맞춰 노동 규제 완화...노·정관계 ‘시험대’

경향신문 | 2026-08-17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172048005>

‘노란봉투법’ 원·하청 본교섭, 한달여 새 10곳→24곳

국민일보 | 2026-08-17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9000003747>

인권위 “기업 인권실사법, 공급망 사각지대 없애야”

이데일리 | 2026-08-20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26166645549288&mediaCodeNo=257>

‘독자 수사’ 대비 실전학교까지...노동감독관 수사 역량 시험대

경향신문 | 2026-08-23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232057015>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무방비...5년 6개월 동안 산재사망 400명

헤럴드경제 | 2026-08-26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52311>

G

지배구조

투명 경영

주주 가치

글로벌 규제 대응

공정거래

계열사 누락 대기업 총수 과징금 부과... 공시의무 위반 제재 강화

한국일보 | 2026-08-04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6080410040002980>

법무부, ‘배임죄 손질’ 추진...정성호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우려는 소실”

경향신문 | 2026-08-05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8051738001>

스튜어드십 코드 10년 만에 개정...현장에서 실효성 논란, 왜?

한국일보 | 2026-08-07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6080714480003116>

9월 집중투표제 의무화...기업은 이사 수 줄이고 임기 쪼갬다

뉴스핌 | 2026-08-11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11000830>

합병가액 ‘기준시가→공정가액’으로...2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머니투데이 | 2026-08-20 | <https://www.mt.co.kr/stock/2026/08/20/2026082017384442062>

삼성전자, 110조+α 역대급 주주환원...성과급용 자사주 15조 매입

한국경제 | 2026-08-21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2156601>

카카오, 사업회사-투자회사 분할 ‘2각 체제’로

한국경제 | 2026-08-21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2141311>

1. ESG 금융

(1) 국내 사회책임투자
채권 상장 종목 수
(매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단위: 개)

구 분	'25.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6. 7월
녹색채권	328	326	319	318	321	334	331	328
사회적채권	1,799	1,811	1,815	1,809	1,818	1,847	1,860	1,877
지속가능채권	202	199	191	185	180	174	160	156

자료: KRX ESG채권 정보플랫폼-통계-상장현황

(2) 국내 사회책임투자
채권 상장 잔액
(매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단위: 천억 원)

구 분	'25.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6. 7월
녹색채권	285	282	272	274	272	273	265	268
사회적채권	2,102	2,108	2,104	2,089	2,081	2,097	2,094	2,118
지속가능채권	151	149	144	138	135	130	128	131

자료: KRX ESG채권 정보플랫폼-통계-상장현황

2. ESG 평가

(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
('25.12.31)

(단위: 건)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	38	78	131	161	204	226	233

자료: KRX ESG 포털

(2)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현황
('25.12.31)

(단위: 건)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지배구조보고서	213	224	231	355	380	530	549	836

자료: KRX ESG 포털

3. 기타 통계

RE100 참여 국내외
기업(기관) 누적 수('25.12)

* CF100 참여 기업 수: 177개
('25.9)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국내	-	6	14	27	36	36	36	36
글로벌	204	269	335	393	426	439	446	444

자료: <https://www.there100.org/re100-members>, <https://24-7cfe.com/>

담당자 및 문의처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ESG경영팀 | esg@korcham.net